

독자권익위원 칼럼

이진철

독자권익위원
전 전남발전연구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80년대 이후 고난과 소외 속에 살아온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 규정하면서 호남 균형발전의 전환점이라 공표했다.

이러 대통령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재정·산업·행정 전반의 전폭적인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재생에너지·반도체·인공지능 산업 유지를 약속하며 행정통합의 신속 추진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통합이 광주·전남의 성장과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부터 행정통합 지원을 위해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 수준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공약했다.

이와 동시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선적 고려, 그리고 특별시가 창업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활성화 지원 등 4개 분야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이상의 대통령과 정부의 4가지 약속 가운데 필자가 가장 주목하는 점은 정부가 공약한 20조원 수준의 재정 인센티브라 생각 한다.

정부는 재정 인센티브의 사용처까지 제시함으로써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즉 20조원을 광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광역교통만(철도·BRT·환승체계), 산업단지·물류·스마트시티 조성, 의료·문화·교육

정부 약속 20조원 인센티브 반드시 찾아와야

등 생활 SOC 확충을 지원하고, 행정통합 비용 보전을 위해 조직 개편·전산 통합, 공무원 인사·처우 조정, 제도 전환에 따른 일시적 비용을 지원하며 지역 균형·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산업 R&D 개발, 기업 유치 인센티브와 청년·정주 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지침 아닌 지침을 제시했다.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파격적 지원에 힘입어 7월 1일 드디어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했다. 이제 특별시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앞서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4개 지원사항, 특히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획득하는 것이라 확신한다. 특별시가 추진 중인 부단체장 인선과 공조직 개편도 이러한 지원 사항과 뒤이어 6월 30일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우이길 바라면서 파격적인 정부 지원 20조원은 광주·전남의 입장에서는 유사 이래 처음 지원받는 금액이라 재원의 규모를 실감하기 어려워 현실감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선다.

그런 의미에서 20조원의 실감나는 규모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0조원은 2026년 광주·전남 총예산(광주시 7조6000억원, 전남도 12조7000억원)과 동일한 규모의 재원이다. 그리고 광주시 재정의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의 사업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호선 지방 부담액이 총사업비(3조 2430억원)의 40%인 1조 3000여억원임을 감안하면 20조원이면 오히려 6개 이상 건설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광주군공항 이전으로 지역사회 관심의 중심으로 부상한 무안국제공항을 2007년 개항 당시 건설비(3000억원)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70개를 건설할 수 있

는 재원이다. 또한 고속도로 400km를 신설할 수 있는 규모이다(고속도로 건설비 전국 평균 km당 500억원). 현재 광주·전남 내 3개(광주~무안/영암~순천/광주~순천)고속도로(228.3km)가 운행되고 있기에 2배 증설이 가능한 규모이다.

그리고 대구군공항 이전 반대급부로 건설하는 군위산업단지(191만평) 건설비(1조2000억원)의 약 17배 규모에 달하고, 향후 호남권의 염원으로 부상할 목포~제주간 해저터널 프로젝트 사업비(15조~16조원)를 능가하는 규모이다.

이와 같이 20조원의 인센티브는 전남광주특별시가 통합경제권으로 구축되고, AI·반도체·신에너지산업의 성장거점이자 한반도 서남권 제 2의 새로운 국토성장축으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에 충분한 규모라 확신한다. 마침내 광주와 전남이 통합을 통해 1년 예산규모가 30조 여원(통산 예산 25조+재정 인센티브 5조원)에 이르는 서울특별시에 이은 두번째 특별시이자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서울·경기에 이은 세번째 슈퍼지자체로 탈바꿈했다.

간절히 바라건대, 안주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이제는 그동안 패배의식 속에 펴보지 못했던 지구·자조적 발전 분위기가 자리잡아야 한다. 정부의 파격적인 4대 인센티브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저절로 광주·전남을 발전시키지 않는다. 정작 실현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각계각층이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호남 균형발전의 전환점이자 대한민국 재도약을 견인한 대한민국 지방시대 성공모델로 부상하기를 기원한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고

최진영

㈜원성 대표



돌봄의 현장에는 수많은 기록이 존재한다.

아동의 상태와 변화, 상담 내용, 서비스 제공 과정과 보호자 전달사항을 남겨야 한다. 기록은 서비스의 연속성을 지키고 전문가의 판단을 뒷받침하며,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현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돌봄을 더 잘하기 위해 기록하는 것일까, 아니면 기록을 완성하기 위해 돌보고 있는 것일까.

아동발달 현장의 전문가들은 아이를 만나기 전 일정을 확인하고, 회기가 끝나면 상담 내용과 관찰 결과를 정리한다. 보호자에게 전달할 내용을 작성하고 장·단기 계획서와 평가보고서를 만든다. 센터에서는 수납과 미납, 바우처, 회기 횡수와 각종 증빙서류를 다시 확인한다. 하나하나 필요한 업무지만, 이 일이 겹치면 정작 사람을 만나고 이해하는 데 써야 할 시간이 줄어든다. 아이의 작은 변화를 세심하게 살피는 일보다 빈칸을 채우는 일이 먼저가 되는 역설도 생긴다.

기록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옮겨 적고,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다시 확인하며, 행정의 실수를 막기 위해 사람이 끊임없이 긴장해야 하는 구조다. 좋은 기록은 돌봄의 질을 높이지만, 과도하고 반복적인 기록은 돌봄의 집중력을 빼앗는다. 기록이 사람을 돕는 도구를 넘어 사람을 통제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록을 위한 돌봄인가, 돌봄을 위한 기록인가

최근 인공지능은 이러한 반복을 크게 줄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정 변경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누락된 기록을 알려주며, 축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의 초안을 만드는 일은 이제 기술이 상당 부분 도울 수 있다. 그렇다면 AI가 발전할수록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역할은 줄어들게 될까.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한다. 기술이 반복적인 업무를 맡을수록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의 가치가 더욱 분명해진다.

AI는 아이가 오늘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 이유를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는다. 보호자의 짧은 대답 뒤에 숨어 있는 불안과 미안함을 온전히 헤아리지도 못한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변화가 처음 나타난 순간 함께 기뻐하고, 쉽게 나아지지 않는 시간 곁을 지키는 것도 결국 사람의 몫이다.

데이터는 변화를 포착할 수 있지만, 그 변화가 한 아이와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고 책임지는 일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진심이 더 중요해진다. 지식과 문장을 만들어내는 비용이 낮아질수록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보다 누가 상대의 상황을 끝까지 이해하려 하는가가 차이를 만든다. 비슷한 보고서와 안내문을 누구나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시대에는 정확 한 문장보다 그 문장에 담긴 관찰과 책임이 더 중요하다. 기술이 평균적인 답을 빠르게 제시할수록 사람은 한 명의 삶에 맞는 질문을 더 깊게 던져야 한다.

하지만 진심을 개인의 희생과 헌신으로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밤늦게까지 기록을 마친 전문가에게 더 세심하

게 아이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진심을 지킬 수 있으면 그에 맞는 시간과 환경이 필요하다. 반복 업무를 줄이고 정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은 단순한 효율화가 아니다. 전문가가 소진되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과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돌봄의 기반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기술기업 역시 무엇을 더 만들 것인가에 앞서 무엇을 줄여줄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기능의 수와 자동화율만으로 혁신을 설명해서는 부족하다. 기술을 도입한 뒤 전문가가 아이를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지, 보호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오래 들을 수 있게 되었는지, 퇴근 후에도 이어지던 업무가 줄어들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현장에 남겨진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기술의 진짜 성과여야 한다.

기록은 분명 필요하다. 다만 기록의 목적은 관리 자체가 아니라 더 나은 돌봄이어야 한다. AI가 기록을 돕고 반복을 덜어낼수록, 우리는 절약된 시간을 다시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 기술이 사람의 자리를 빼앗지 않고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돌봄 현장에서 AI가 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앞으로 좋은 돌봄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진 기관이나 가장 많은 기능을 갖춘 기술만은 아닐 것이다.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한 사람을 숫자와 기록으로만 보지 않는 태도,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까지 들으려는 노력, 그리고 끝까지 곁을 지키려는 책임이 돌봄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AI가 더 똑똑해지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사람다워져야 한다. 결국 돌봄을 완성하는 것은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기 때문이다.

사설

자치구 ‘일반시 전환’, 시민 공감대 우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추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찬성측은 자치권·재정권을 바로잡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반대측은 ‘특별시’ 방식의 통합 취지와 현 광주권의 도시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원) 등이 지난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 재정권과 자치권을 전남 22개 시·군 수준으로 보완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행정통합 이전부터 이를 요구해 온 5개 구청장들은 환영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전남지역 22개 시·군에 비해 보통교부세 배분과 행정권한에서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은 자치권과 재정권을 바로 세우고 주민 밀착형 생활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일반시 전환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하지 않다.

여기에 ‘통합특별시’ 방식의 통합취지 훼손과 ‘광주 해체론’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즉, 정부와 옛 광주시·전남도가 광역행정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통합 방식으로 관리에 중점을 둔 ‘특별도’가 아닌, 집행에 방점을 둔 ‘특별시’ 모델을 채택했는데 자치구가 일반시로 개편될 경우 광역단체인 특별시의 조정 권한은 오히려 약화돼 통합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자치구가 일반시로 승격돼 별도의 행정을 하게 될 경우 옛 광주시는 더 이상 부활이 불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이날 SNS에서 “5개 구가 일반시로 분할될 경우 공황 부지와 반도체 산단 등이 집중되는 광산구로만 지방세 수입이 쏠려 동·서·남·북구의 재정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옛 광주시민중 일부는 지금도 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일방적인 속도전으로 별다른 검증없이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또 무리한 속도전에 따른 후유증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은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론 수렴 등 지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한다.

폭염 취약 계층 3만 가구 넘는데… 대책은

저렴한 가격의 여관·고시원·쪽방을 전전하거나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전남광주에 3만가구가 넘는다고 한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의 ‘거처의 종류 및 가구원수별 가구’ 자료 분석 결과에는 이들 주거 취약층의 거주형태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아파트 등 고정된 주거형태에서 벗어나 숙박업소 객실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54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2324만6000가구)의 2.3%다.

이중 호텔·여관 등 거주 가구가 5만8000가구, 판잣집·비닐하우스가 9410가구였으며, 상가·공시장 임시막사·마을회관 등 기타가 47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남광주에서는 비정형 거처 거주 가구가 3만 813가구나 됐다.

숙박업소 객실 거주 가구 3281가구(광주 1135가구, 전남 2146가구), 판잣집·비닐하우스 291가구(광주 43, 전남 248가구) 등 3572가구였고 상가·마을회관 등 기타가 2만7532가구(광주 7072가구, 전남 2만460가구)였다.

여기에서 전남지역 주거 취약계층 가구가 광주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나 상대적 주거 취약성을 보여줬다. 문제는 이들 가구의 주거환경이 일반주택에 비해 폭염과 한파에 취약하다는 데 있다.

외부 기온의 영향을 직접 받는 비닐하우스·판잣집의 경우 단열과 환기, 냉·난방시설 등이 충분하지 않아 이들 이상기온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냉·온방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장시간 가동이 어렵다.

여관 객실·고시원·쪽방 등도 고령자나 저소득층, 노숙위기 청년 등이 보증금 없는 저렴한 월세를 이유로 주로 생활해 사실상 안정적인 주거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이상기후로 극한 폭염과 극한 한파가 일상화된 요즘, 농촌지역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거처 가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절실하다.

냉·난방 지원 등 이들의 생활환경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 안정적인 주택으로의 이동 등을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령인	차재진	사 장 정점민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논 설 실	370-7200		
	산업경제부	370-7020	임 월 실	370-7000		
	사 회 부	370-7030	총 무 국	370-7093		
	문화체육부	370-7234	사 업 국	370-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편 집 부	370-7082	광 고 국	370-7070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